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광주 동구,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개최

민·관협력 저소득층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광주 동구는 5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동구자활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동구자활기관협의체는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광주고용복지센터,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역 내 자활지원체계 수립, 이행상황 점검, 위탁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협의·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돕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추진 사항 등을 보고받고, 자활지원사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조언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발굴을 하고자 공공·민간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민·관이 협업체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들림이 필요한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종합조사표, 장애유형별 전쟁만 부추겨” 비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시간 총량 놓고 장애혜택 비중만 수정”  
“총량 늘리지 않고 유형별 전쟁만 촉발”  
“예산 늘려 서비스 지원 총시간 늘려야”

장애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장애인단체가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라고 주장, 보건복지부에 2020년 장애인 관련 정책 예산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산 반영 없는 사기행각"이라며 이곳에서 8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전장연 등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감축 등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한정된 예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종합조사표 평

가항목은 기능제한(X1), 사회활동(X2), 가구환경(X3)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영역별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중 X1의 총점이 532점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4월 종합조사표 조정에 따라 X1 영역을 구성하는 '시·청각복합 평가' 및 '인지행동특성' 부분의 비중이 증가한 점이다. 이로써 X1을 구성하는 나머지 일상생활 동작영역과 '수단일상 생활 동작' 부분은 그 비중이 줄었다. 문제는 총량은 그대로 둔 채 비중만 조율하다보니 각 부분별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신마비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및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어 '시·청각복합 평가' 및 '인지행동특성'에 부여된 점수는 그대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없게 된다. 육창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시간 감소는 치명적이다. 장애인단체 측에서 "총량은 늘리지 않은 장애유형별 전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단체 측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X1 총량을 그대로 둔 채 '일상생활 동작영역'과 '수단일상 생활

동작' 부분만으로 평가하고 시청각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시·청각복합 평가' 및 '인지행동특성' 부분은 별도의 활동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두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해 서비스 지원 총 시간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예산

으로 올해 대비 19.2%(약 5200억원) 증액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장애 인정책국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이라며 "활동서비스 관련 증액 예산은 3128억원이며 이마저도 최저임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릴 수요자와 평균 15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안에서 7312억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측은 오는 15일 장애인연금 등 관련 기자회견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종합조사표는 이달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 대안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손상도를 기준으로 장애를 1~6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종합조사표는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별도 심사로 등급과 관계없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표가 제한된 예산에 맞춰 짜여졌고 지원 규모가 기존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4일 오후 남구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열린 '제8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김병내 남구청장, 센터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시, 남구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시설 개선 장마철 천정 누수·전기합선 등 시설노후로 안전위험 노출

광주시는 최근 남구 사동 남구 여성장애인복지센터에서 '제8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현황을 점검한 후 이용자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경청의 날'은 이용섭 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나현 시의원, 오영순·박희을 남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태 시민

권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경일, 김천수, 백희정, 최낙산, 최은순, 신종철, 노미향 복지건강환경생태분과 시민권익위원들도 참석해 남구 여성장애인복지센터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서 시민들은 남구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시설개선을 건의했다. 시민들은 "이동약자들에게 필요한 엘리베이터는 2003년에 설치돼 왔고 고장 등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며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진입로 외벽의 균열이 심해 시설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민 의견을 들은 이용섭 시장은 "이곳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찾는 여성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의견을 반영하되 관계기관 및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속히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